전자신문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기업 디자인 활용률 12%서 20%로

산업부 '디자인 혁신 2020' 착수
내년 200억 투입 융합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 12%에서 오는 2020년 20%로 끌어올리는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2020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21세기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디자인 강국' 비전 아래 수립한 '디자인산업 융합전략'의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디자인의 '스필오버(Spill-over)' 전략으로 산업 융합을 활성화하고 디지안산업 경쟁력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기업의 디자인 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 융합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한다. 2010년 현재 국내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은 소기업 11.3%, 전체 기업 12.8% 수준이다. 오는 2020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다.

디자인산업 융합전략 세부 추진계획

전략	세부 추진계획
산업융합 혁신	△타부처·지역·민간 확산
	△中企 디자인 혁신 2020 프로젝트
	△대학원·기관 활용한 엔지니어링 디자이너 양성
디자인 비즈니스 생태계 고도화	△디자인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서비스 디자인 신시장 창출
	△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 여건 조성
위상 강화와 디자인 한류 확산	△디자인진흥원 역할 고도화△디자인 인프라 강화
	△디자인 인식 제고 및 해외 수요 확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를 위해 산업부는 내년 200억원을 투입해 전자, 로봇, 육상교통기기, 해양·조선, 생활산업, 의료, 서비스 7대 중점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디자인 융합기술 개발 사업을 전개한다.

산업 분야별 전문 디자이너 양성 차원에서 내년부터 분야별로 특화된 융합 디자인대학원을 지정한다. 디자인대학원에 정보기술(IT), 자동차, 로봇, 서비스 등 특성화 디자인 전공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내에 '디자인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산업별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범부처 디자인 정책 협력을 위한 '산업디자인진흥협의회' 설치도 추진한다. 관련 법을 개정해 관계 부처간 디자인 협력 사업과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안전한 샵메일, 당황하면 안돼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연구개발타워에서 전자문서유통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홍보대사인 개그우먼 이수지 씨와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서광현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장, 개그맨 정찬민 씨가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정부3.0 시대 투명성 확보 위해 스마트 직접민주주의 도입해야"

창조경제연구회 공개포럼

정부3.0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 직접민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3.0은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 그리고 민간사업자에 의한 다양한 매쉬업 서비스를 표방하지만 관련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위해 대의민주제보다 의사결정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직접민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가 개최한 '정부3.0과 스마트 직접민주제' 공개 포럼에서 이민화 이사장은 "2009년부터 공공 데이터는 국가 단위를 넘어 국가 개방이 되고 개별 매쉬업에서 매쉬업 플랫폼 경쟁으로 돌입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EU와 G8 정상은 개별 국가 수준을 넘어 국가 간 정보 개방과 공유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추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3.0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 직접민주제' 도입을 제안했다.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인터넷은 직접민주제의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 보안문제만 해결된다면 가장 확실한 방편이다. 창조경제연구회는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 국가 단위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대 효과도 크다. 창조경제연구회에 따르면 1000명의 일반 대중에게 스마트 직접민주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5%의 정부 예산 절감, 7.6%의 사회적 갈등 비용 축소, 7.9%의 이권 경제 축소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는 각각 29조원의 정부예산 효율화, 19조원의 사회갈등 비용 절감, 4조원의 이권경제 축소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두 배의 경제 성장동력 획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패널로 참석한 남민우 청년위원장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정부3.0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안은 타국 정부2.0 수준"이라며 "매쉬업 서비스는 이제야 본격화되고 있어 개방과 공유라는 세계적인 물결을 늦게 동승했다"고 지적했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올해 6월 G8 협정에 따른 국가 간 데이터 개방은 한국 벤처의 세계화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창기 직접민주연구원 이사장은 "이제 직접민주제가 이권 경제의 발호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거버넌스 대안이며 스위스가 그 사례"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과학기술로 사회문제 해결 토론회 개최

미래부, 내일까지 이틀간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와 콘퍼런스를 27일과 28일에 연이어 개최한다.

27일에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강대희 서울대 의대학장,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등 인문사회·과학기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일반인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28일에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을 개발·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에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미래부가 주최하고 7개 연구기관(한국연구재단·KAIST·한국화학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R&D) 성과 전시회도 열린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지급결제 수단으로 현금 여전히 선호

한은, 사용비중 34.8% 달해… 건수 기준으론 카드와 비슷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지급결제 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이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이 발표한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의 거래 비중(34.8%)은 지급카드(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를 합친 것)의 54.2%보다 낮지만, 3분의 1을 넘었다. 사용 건수 비중으로도 현금은 41.3%로 지급카드(48.5%)와 비슷한 수준이다.

적은 금액을 결제할수록 현금 사용 비중이 높았다. 1만원 미만의 소액 구매 시에 현금을 사용한 사람은 58.6%였다. 10만~50만원 및 50만원 이상 고액거래에서도 각각 23.1%, 16.8%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현금은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급 수단으로도 뽑혔다.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 등 지급 수단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현금이 88.5점을 받아 체크·직불카드(76.1점), 신용카드(72점)를 제치고 가장 우수한 특성을 가진 지급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매일 현금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중은 37.8%로 나타났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동일 IP로 중복 입찰 불허

조달청, 부정 방지 위해

조달청은 내년부터 부정입찰 방지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같은 인터넷프로토콜(IP)로 중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차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일부 영세 중소기업이 통신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인터넷 회선을 공동하는 것을 감안해 동일 IP 중복 투찰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위장업체를 설립해 부정입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 같은 입찰에는 동일 IP로 1회만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155억 들여 생체모방 자율로봇 기반기술 확보

방사청, 2021년까지

정부가 2021년까지 예산 155억원, 연구인력 145명을 투입해 생체모방 자율로봇 기반 기술을 확보한다. 민간 부문의 연구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서울대에 '생체모방 자율로봇 특화연구센터'도 개설한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초소형화와 신소재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율로봇 기술을 선행 개발하는 생체모방 자율로봇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이 미래 전장에서 감시와 정찰 분야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다. 국방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대학 등 민간 부문의 연구 역량을 활용해 국방과학기술 개발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번 특화연구센터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8개 대학과 서울대병원이 참여한다. 앞으로 인식·판단 기술, 감지센서 기술, 정보전달 기술, 구조·메커니즘 기술, 복합거동제어 기술 등을 연구한다. 국방 중장기 계획에 필요한 감시·정찰 기술 기반을 확보해 특수전과 대테러전 등에 활용한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매년 한두 개 이상의 국방 분야 특화연구센터를 설립,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